

오피니언

월/요/광/장

구길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최근의 시국사건 무죄 판결 논란에서 비롯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의 대립으로까지 번졌던 사법 갈등사태가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래 이에 따른 법률안을 계속하여 제출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내놓은 개선안이지만 그 내용 중에는 위헌의 소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많다.

첫째,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2명씩 등 9명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의 보직 및 전보에 대해 의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고, 대법원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법관 등으로 재직된 변호사는 퇴

직 시점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그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지 법원에 대한 불만의 표출 정도에 그칠 공산도 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민

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시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일반 공무원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것과 대비시키고 있다(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른 다른 권력(특히 행정부)으로부터 독립해서 재판을 하게 하자는 이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

와 직과 전보에 대해서 의견기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행정부추진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포함시키겠다는 시도는 앞서 언급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고유한 권한이다.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는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양형권한에 대해서 행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시 위헌일 수밖에 없다.

셋째, 법관 등으로 재직된 변호사는 근무한 법원 등이 관할하는 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안 역시 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많다. 과거에 이미 이러한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관절이 집권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이는 역사의 후퇴이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정부를 위한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이 후퇴하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가

주주의를 최고의 정치체도로 인식하고 발전시켜 오면서 이를 실현시킬 방안으로 삼권분립원칙을 정립시켰다. 즉 제왕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전횡을 휘둘러 왔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권을 독립시켜 이를 입법부(국회)가 담당하도록 이권분립을 이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법권을 독립시켜 이를 사법부(법원)가 담당하도록 했다. 행정부(정부)에는 행정권(법률을 집행하는 권한)만을 남김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할 때 민주주의가 가장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이념인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1조도 '사법권은 법관으

로 살피보면, 독재권력이 집권했을 때에는 그 독재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한 적도 있었다. 소위 유신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내부만의 의견 집약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회나 정치권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헌법 규정상의 삼권분립원칙과 이에 따른 사법부 자율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보

시설

5·18 30주년 '전국화' 아직도 요원한가

"5·18이 뭐예요. 맡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가 5·18 30주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난 15일 오전 11시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대전지역 정신승계대회'에 잠시 눈길을 주던 일부 시민들이 한 말이다.

행사가 시작됐지만 좌석은 대부분 행사 관계자들로 채워졌을 뿐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5·18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념사진전'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어 전시 자재로 끝났다고 한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리기로 했던 '광주민중항쟁기념 토론회'도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 주최측은 6·2 지방선거 일정과 행사위원회 회원·단체 간 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보가 5·18 행사 등이 예정돼 있는 전국의 일부 지역을 현지 취재하면서 확인한 5·18 민중항쟁 30주년의 현주소다. 우리는 그동안 반민주·독재에 맞서 싸운 5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광주만의 5·18로 귀착돼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그에 따른 이념 갈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5·18이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5·18 자체를 모른다는 현실도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자성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이번 5·18 30주년은 전국화, 세계화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행사로 전락한 현실을 냉철하게 따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도올 급증' 건설발 경제위기 대책 세워야

광주지역 어음부도올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지난 4월 광주지역 어음부도올은 2.15%로 3월의 0.42%와 대비하면 무려 4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경영난이 광주지역 어음부도올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 건설업 부도금액만 지난 달보다 285억9000만원 급증한 331억 5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금광기업, 새한철강 등의 어음이 이번 달에 금융권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당분간 어음 부도올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간판 건설사가 줄 줄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시공능력 '빅 5' 가운데 4곳이 무너지는 등 지역 건설업이 거의 초도화되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크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만큼 중견 건설업체의 붕괴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지역금융 부실화 등으로 지역경제는 뿌리 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은행권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등 구조조정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도 단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까지 '부도 도미노'에 휘말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금융권이 무조건 돈줄만 뿜 것이 아니라 육성을 가려야 한다.

올들어 국가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지역경제는 여전히 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 역시 선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로를 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안광현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등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거나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달라거나 반대로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을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이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검사들은 그 부탁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검사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실제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들의 부탁은 마음속에만 간직할 채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개를 일일이 소리 내어 불러보다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름 하나를 추천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몇 개월 뒤 필자는 교도소에 있던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자신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서 매우 고맙다는 취지였다. 또 필자가 추천해준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정했다는 '그'의 편지를 읽고 사소한 부탁을 들어준 것을 그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신선하게 느끼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마치 필자가 1998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어느 조직폭력배의 황당한 부탁

그런데 필자는 1년 전 경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적이 있었다. 독자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공간 간 일화를 소개해 보겠다.

그 무렵, 필자는 관할 경찰을 지휘하여 50여 명의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사건을 한창 수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중의 한 조직원(편의상 '그'로 지칭)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기록상 '그'의 죄질은 결코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를 조사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본(公憤)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는 나에게 "이 사건으로 구속될 무렵 아내가 딸을 출산했는데 아직까지 딸의 이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의 이름으로 세 개를 생각해 보았는데,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중의 이름 하나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계속 '그'가 부탁을 하였고 또 그 부탁이 무리한 것도 아니어서 그 이름

이 영화는 한 탈옥수가 우연히 만난 한 소년의 작은 도움을 받고 인간적으로 크게 감명을 받아 그 주인공이 성년이 되었을 때, 금전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그 탈옥수를 도와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년이 되었을 때 그 탈옥수로부터 뜻밖의 후원을 받고 화가로서 크게 성공한다.

필자는 '그'로부터 위와 같은 편지를 받은 이후, 그 부탁이 부정할 생각이 아닌 이상,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잘 살펴보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혹시 그 부탁이 외관상 사소한 것일 지라도 그 부탁을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과 같은 규모의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이지만 정부나 국가의 힘보다는 후보도시의 경쟁력과 유치노력이 개최지 결정을 좌우했다.

독립적인 성향의 집행위원들을 하나 하나 붙잡고 광주를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일은 지금껏 거쳐왔던 그 어떤 선거보다 힘겨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첫 도전에 쓰러진 패배를 겪었다. 다시 일어난 것은 앞으로 광주의 30년이 달려있어서다. 후손들에게 잘 사는 광주를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책무다. 앞으로 광주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지난 세기의 소외와 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박광태

다시 5월이 되었다. '5월'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 온다. 80년 5월 동교동의 밤은 철쭉 같았다. 5월17일 밤 11시30분 무장한 군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행해갔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국은 암흑에 휩싸였다.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비서로서 선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피로 몰든 광주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암흑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하다. 5월이 되면 늘 그렇게 아리고 저릿했다.

현재, 올해는 가슴 벅찬 뿌듯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5월을 맞이할 수 있었다.

후를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현실에 안주해 정부가 알아서 나눠주기만을 바라보며 불평만 하고 있던 과거의 나후는 현재도, 미래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에 광주라는 브랜드를 알리려 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앞다퉈 나선 국제대회 유치에 뛰어들었다. '대입'이라는 압박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2년간 복속을 걸고 지구를 8바퀴 바나나 돌렸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26개국 집행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대륙을 날아다니고 비행기 안에

광주 미래 열어 줄 '유니버시아드'

꼭 1년 전 지구 반대편 땅 벨기에 브뤼셀에서 생애 최고의 감동과 희열에 눈물 흘렸던 기억 때문이다. 그때를 떠올리면 또다시 가슴이 벅차오른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광주가 확정된 순간, 광주의 새로운 미래, 광주가 세계로 힘차게 도약해갈 수 있는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기쁨에 진한 눈물을 흘렸다.

유니버시아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 경제적 소외로 낙후되었던 광주가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갈 도약의 기쁨을 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줄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희망을 품고 경쟁도 없이, 유치전쟁에 뛰어들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도전은 참으로 용감했다.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과 같은 규모의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이지만 정부나 국가의 힘보다는 후보도시의 경쟁력과 유치노력이 개최지 결정을 좌우했다.

독립적인 성향의 집행위원들을 하나 하나 붙잡고 광주를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일은 지금껏 거쳐왔던 그 어떤 선거보다 힘겨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광주의 향후 30년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과거와는 다른 광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광주, 잘사는 광주를 물려주기 위한 열정과 노력, 도전과 용기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가슴 먹먹한 5월이 아닌, 뿌듯하고 행복한 5월이 머잖아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는다.

<광주광역시장>

無等鼓

추리소설의 탄생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프랑수아 비도크다. 강도와 절도, 인신매매, 탈옥 등은 범죄를 일삼아 감옥을 제정쩡히 드나들던 19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범죄자다. 함께 복역하던 죄수의 고백을 당국에 알려 경찰 정보원이 된 뒤 파리 범죄수사국(쉬르테)을 창설해 초대 책임자를 맡았다. 법인 검거에 최초로 과학 수사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파면되고 만다.

그의 굴곡진 인생 역정은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안겼다.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보트랭이나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장과 자베르,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 단테스는 모두 그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

조선시대엔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의로운 도둑들이 있었다. 홍길동과 장길산, 임객정은 끝까지 의적(義賊)으로 남았다. 1982년에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지적

만 골라 대답한 절도 행각을 벌인 '대도'(大盜)가 붙잡혔다. 하룻밤에 수억원대 금품을 털어 일부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현대판 홍길동'이란 별명까지 얻은 조세형이다. 15년만에 출소한 그는 신인 간증과 범죄예방활동으로 새 인생을 여는 듯했다.

하지만 '재 버터 개 못 준다' 했던가.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주먹 3곳을 털다 검거되더니 4년 뒤엔 서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붙잡혔다.

그의 이름이 다시 회자된 것은 지난해 7월, 광주 남구의 한 근엄방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 4인조 강도사건의 용의자에게 밀항 상담을 해준 것이 계기였다. 사건 연루 가능성이 낮아 그대로 넘어갔지만 이번엔 그 사건의 범인이 빠졌을 귀금속 판매를 앞선한 혐의로 체포돼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지만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다시 장물미끼로 전락한 그의 인생말초가 참 처량하다.

/정추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The Kwangju Ilbo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어문제작부 2200-679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